

이종찬의 광복회가 '김원웅 악몽'에서 벗어나려면

태평로



김 태 훈
논설위원

들이었다. 임시정부는 상해 시절 헌법을 만들고 이후 5차례 개정된 헌법을 이미 갖고 있었다. 그런데도 광복 후 제헌 과정에 국내에 있던 두뇌들을 참여하고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해 총독부에서 근무했던 이들은 친일파였지만 당대 최고 엘리트이기도 했다. 임정 요인 신익희가 그들에게 훗날 제헌 헌법의 기초가 되는 초안을 만들게 했다. 광복 후 숨죽이고 있던 총독부 출신 한인 엘리트들은 처음 신익희의 호출을 받고 "이제 죽나 보다" 했다고 한다. 그런

2차 대전 후 등장한 독립국 중에 헌법 직접 만든 나라 거의 없어 한국은 '내 힘으로 제헌' 성공해 광복회, 臨政 통합 정신 계승해야

데 "건국에 힘 보태는 것으로 지난 과오를 씻으라"는 말에 감복했다. 이후 임정 산하에 행정연구회를 결성해 헌법 초안을 만들었다. 헌법학자 유진오도 참여했다.

지난주 선출된 이종찬 신임 광복회장이 당선 후 회원들에게 큰절하며 "힘을 합치자"고 했다. 광복회장 선거는 서울 서대문의 국립입시정보기법관에서 치러졌다. 그중 1층 야외 광장에 조형물 '역사의 파도'가 있다. 수많은 물결이 합쳐져 대한민국이 탄생했다는 의미라고 한다. 이 신임 회장은 "그 물결 사이 사이에 독립선언서, 대한민국 임시헌

장, 제헌 헌법 전문 등이 새겨져 있다"고 했다. 독립과 건국의 결실인 제헌도 민족 역량을 결집해 이룬 성과다.

광복회는 신익희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광복뿐 아니라 건국에 기여한 이들의 노력이 폄여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김원웅 회장 시절 광복회는 그 길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다. 이승만이 세운 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했다. 전쟁에서 나라를 지켜낸 구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도 현충원에서 파내자고 했다. 나라를 없애려 쳐들어온 자들과 싸운 이를 배제하고 어떻게 광복을 누릴 수 있느냐는 건가. 김원웅 전 회장의 잦대대라면 총독부관리를 건국에 동참시킨 임정 요인들도 파도 대상이다. 그는 "6·25는 민족 해방 전쟁이라는 북한 주장을 부인하지 못한다"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종북이면 서슴지 않고 종북을 택하겠다. 정의로운 종북이기 때문"이란 말도 했다. 광복만 하면, 이후에 들어설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어도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지 않고선 할 수 없는 언사였다.

이종찬 신임 회장은 통합을 강조했다. 이런 세력까지 포용해선 안 된다. 이 신임 회장이 "대한민국은 태어나면 안 됐다"처럼 도를 넘는 말을 하는 이들이 아니라면"이라는 통합 단서를 단 것도 그래서였을 것이다. 그가 내일 광복회장에 취임한다. 헌법을 만들 때 독립지사들이 보여준 통합 정신을 살리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들과는 단호히 맞서는 광복회가 되기를 바란다.

김준의 맛과 섬 [140]

섬진강 재첩국

'재첩국 사이스, 재첩국.' 이른 새벽이면 아침매달 외침으로 하루가 시작되곤 했다. 1970년대 부산 풍경이다. 재첩은 낙동강 하류와 김해, 명지, 하단 등에 서식하는 새조개를 말한다. 시내에만 400여 명의 재첩국 아지매들이 있었다. 통금이 해제되기까 무섭게 하단 선착장에는 새조개를 받으려고 줄을 섰다. 이제 그곳에는 재첩도 아지매도 없다. 구포시장에만 섬진강 재첩이 자리를 잡고 있다. 토박이는 떠나고 굴러온 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재첩은 광양과 하동의 섬진강에서 채취한다. 재첩 서식의 3대 조건으로 모래, 민물, 염도를 꼽는다. 우선 모래가 없으면 유생(幼生)들이 자리를 잡지 못한다. 여기에 바닷물이

섞인 하구역(河口域·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지역)이라야 한다. 이제 섬진강이 마지막 보루다. 이곳 재첩잡이는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놀림'으로 국가중요어업유산에 지정되었고,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준비 중이다.

낙동강에서 어머니가 끓여주던 재첩국을 먹고 자란 베이비붐 세대는 섬진강 재첩으로 어머니와 고향의 향수를 달래기도 한다. 섬진강 자락에 살았던 탓에 재첩국을 심심찮게 먹었다. 그때 어머니가 끓여주던 국은 재첩된장국이었다. 솥에 재첩을 가득 넣고 부족하면 다슬기를 넣기도 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끓여준 재첩된장국에 밥 한술 말아 후루룩 마시고 새벽같이 소를 끌고 나가시곤 했다. 재첩은 숙취와 해독에 좋아 '임추 전제



침은 간장약'이라는 말도 있다. 임원 한 자에게 보양식으로 선물하기도 했다. 일본까지 수출이 되고,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찾기도 했다.

재첩은 다 자라도 어른 손톱 남짓하기도 한다. 섬진강 자락에 살았던 탓에 재첩국을 심심찮게 먹었다. 그때 어머니가 끓여주던 국은 재첩된장국이었다. 솥에 재첩을 가득 넣고 부족하면 다슬기를 넣기도 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끓여준 재첩된장국에 밥 한술 말아 후루룩 마시고 새벽같이 소를 끌고 나가시곤 했다. 재첩은 숙취와 해독에 좋아 '임추 전제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社 說

의원 비위 공개는 일 하는 국회 윤리위, 김남국 징계엔 어떻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00억원대 코인'의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했다. 징계안이 특위에 회부된 지 12일 만이다. 비교적 신속하게 회의가 열렸다. 여야는 자문위 의견 제출 기한도 30일로 줄였다. 그만큼 '김남국 코인'에 집중된 국민적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 윤리특위가 실제 김 의원을 징계할지는 미지수다.

한국 국회 윤리위는 비위 의원을 징계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문제를 공개하기 위한 기구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2020년 4월 시작한 21대 국회에서 윤리위에 올라온 의원 징계안 38건 중 처리된 것은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비슷했다. 징계가 의결된 사례가 18대 국회 4년간 1건, 19대 국회 4년간 1건이었고, 20대 국회에선 전무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마지못해 동료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지만 그걸로 끝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민주당 스스로 윤리특위에 제소한 박완주 의원, 위안부 후원금 유용 등의 혐의로 제소된 윤미향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박태흠 의원 등도 그렇게 유아무야했다.

또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 사망, 나태한 의료 행정이 부른 비극

30일 새벽 경기도 용인에서 차량에 치인 70대가 수술 가능한 병원 중환자실을 찾다가 2시간여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급대원들은 신고 접수 10분 만에 이 환자를 구조해 인근 대형 병원 11곳에 이송 여부를 문의했으나 중환자 병상 부족을 이유로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다. 사고 발생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의정부의 한 병원이 수용 가능하다고 했지만 환자는 이송 중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를 일으켰다.

최근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 사망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3월 대구에서도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학생이 2시간 동안 응급실을 돌다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국민소득 3만불 의료 강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원시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주변에 대형 병원이 수도북한 데도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문제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는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들이 중환자 병상을 의무적으로 1~2개씩 비워두도록 하고 이를 보상해줘야 한다. 그래야 응급 환자가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주장하지 만 민주당은 "앞선 38건의 징계안은 그대로 두고 김남국 징계안부터 처리하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이미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윤리위에서 여야가 제명에 합의해도 실제 김 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이는 개헌 발의와 똑같은 수준이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제명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수십억원대 신생 코인을 거래·보유한 의혹, 가상 자산 과세를 유예하고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법을 만드는 등 이해 충돌 논란,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이중 수시로 코인을 거래한 정황 등으로 비판이 커지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 자체 조사와 징계, 코인 매각 지시는 없던 일이 됐다. 그동안의 관행으로 보면 이제 여야가 갑론을박하다 김 의원 징계 결론을 못 내리는 순서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발생했을 때 즉각 수용할 수 있다.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구조대원들이 계속 병원에 전화를 돌려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묻는 것도 한심한 일이다. 각 병원이 가용한 의료진·병상 정보를 전산망에 올리게 하고 구조대원들이 응급환자 상태를 입력하면 수용 가능한 병원이 즉각 나오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어려운 일인가. 대구시가 지난 3월 10대 사망 사건 이후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를 다른 시·도로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벼운 경증 환자들이 대형 병원 응급실로 몰리면서 정작 중증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응급실 과밀화 현상도 심각하다. 응급실을 이원화해 걸어서 들어오는 환자는 경증 응급실을 이용하게 하고 중증 응급실은 구급차에 실려오는 환자만 받아야 한다.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얼마나 어려운 문제라서 아직도 안 하고 있는가.

의사들이 위험한 응급 수술을 기피하는 것도 문제다. 응급 수술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원 강화, 진료 결과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법적 책임 감면 등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일을 하려고 있는 부처가 보건복지부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 국민 자존심 짓밟았다는 민주당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한국 주최 다국적 훈련에 참가하려고 29일 부산에 입항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그 배에 옥일기(旭日旗)가 내걸려 있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했다. 일본 자위함기는 과거 군국 일본 해군기였던 옥일기와 같은 모양이다. 국제적응연맹(IFFA)은 정치, 종교적 이미지가 사용을 금지한다며 응일 때 옥일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일본 진보 언론 아사히신문은 100년 넘게 옥일기와 비슷한 사기(社旗)를 쓰고 있다. 일본 사회에서 오래된 문양인 셈이다.

이 옥일기에 대해서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국가 간 문제가 되면 다른 얘기가 된다. 일본이 1954년 해상자위대 기호를 정한 이후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군함이 외국에 입항할 때 자국 국기와 군기를 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관례다. 과거 일본과 싸운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의 침략을 당한 중국도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한국도 국제사회의 이런 관례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일본 함정이 옥일기를 달고 한국에 입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대

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깃발을 단 일본 함정이 입항했다. 그때 민주당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민주당 식이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국민 자존심을 짓밟은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당대회 돈 봉투 파문, 김남국 코인 파문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국민의 비판적 시선을 돌리기 위해 하는 일 중 하나가 반일 물이다. 그러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을 스스로 비난하는 역설까지 낳았다.

민주당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일본 함정은 영원히 한국에 입항할 수 없다. 한국 군함도 일본에 가서 옥일기를 단 일본 함정 옆에 기항할 수 없다. 우리 해군은 지난해 11월 일본 가나가와 현에서 열린 해상자위대 창설 기념 국제 관함식에 참가했다. 이번 일본 함정 입항으로 2018년 일본 초계기와 우리 해군 함정 충돌로 끊긴 해군 교류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안보에 필요한 일이다. 옥일기에 대한 시각은 다양할 수 있으나 국익을 기반으로 한 국가 관계는 달라야 한다. 모든 일은 지나치면 모자라니만 못하다.



동영상 시청

6.25 우방들의 피로 지킨 자유... 우크라이에 무기로 갚자

뉴데일리 newdaily.co.kr

과감하게 하라... '비살상' 토 달지 말고

6.25 때 '비살상' 조건달았더라면, 한국은 어쩔뻔? 핵 있다고 마구 침략하는 러시아는 반(反)문명 조폭국가 문명국가 위협하는 중공·러시아·북한에 맞서 싸워야 대한민국 생존

[번역자 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가져온 논점은 바로 이거다. 핵이 있다면, 힘으로 다른 나라를 집어삼켜도 되는 것이다. 73년 전에도 스탈린(소련)과 모택동(중공)이 그런 짓을 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보다 나은 것 없던 우리를 전세계 22개 국가가 도왔다. 낙동강까지 밀렸던 우리는 서구 주축 문명국들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했다. 그리고 지금 G7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우리는 어느 선까지 우크라이나 지원에 참여해야 할까? 대한민국 대외정책의 가장 중요한 논점이 이 문제를 다뤄 왔다.

왜 러시아와 당당하게 맞서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은 (히로시마 G7 정상 회의 2023)에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양자 회동을 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이 외교는 문재인 시대의 북-중-러 전 체주의 추종과는 정반대되는 행보였다. 좌익은 아니면서도 중국-러시아의 보복을 염려하는 일부 신중론자들과 중간적 입장파도 충출할 수 있는 행보였다. 이들은 윤석열 외교가 자칫 모험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비

판할지 모른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그것은 과감하게 시도할 만한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45~1989년 사이의 세계 정치는 자유주의나 공산주의의 동서 냉전이었다. 이 싸움이 1989년, 소련 붕괴로 끝났다. 프렌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언'을 선언했다. 더는 싸울 일이 없으리란 것이었다.

그러다 2001년 (9.11 사태)가 일어났다.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낙관론이 무참히 깨진 순간이었다. 새 유엔 헌법회의 '문명충돌론'이 더 큰 설득력을 발휘하는 듯도 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헌법헌과 후쿠야마의 패러다임(paradigm)을 뛰어, 세계를 '선(善)의 문명(good civilization)'과 '악(evil)의 세계'로 갈랐다. '악의 세계'는 스빈 라덴의 알카에다 테러리스트, 시리아, 시리아,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같은 국가를 뜻했다.

6.25 핵심 주축 소련(러시아)과 중공, 반문명국가 선두로 등장

최근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푸틴의 마피아 국가와, △대만해협을 위협하고 △남중국해와 인도-태평양 통행의 자

유를 침범하고 △한미일 반도체 기술을 훔치고 △디지털 권위주의를 자행하고 △신장 위구르족을 탄압하고 △세계 곳곳에 비밀 경찰서를 두는 중공의 시진핑이 세계의 악당으로 떠올랐다.

그렇다면, 2023년 현재의 '선의 문명'과 '악의 세계'의 싸움에서 한국 자유 진영은 어떤 외교적 행태를 보여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원래 한미 동맹과 유엔 등 자유 국가들의 연대로 △간국도 하고 △나라도 지키고 △변명도 이복한 나라다. △근대 문명 △자유 체제 △개방 경제 △개인의 인권 △법률의 지배가 만든 문명국가다. 이런 나라엔, 폐쇄적이고 고립적이며 극수(國粹)적인 정책은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해한 이재명의 친러 거성

이름에도 예컨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서 한국의 일부는 이렇게 말한다.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신세 질 게 없는 나라. 러시아가 보복할 것" (이해한) "국익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 (이재명)

이런 식이라면, 스탈린-마오쩌둥-김일성의 6.25 남침 때 대한민국은 지도상에서 지워졌어야 했다. 이런 식이라면, 우리는 △북한 핵에 대한 한미 핵 협의의 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창설 △전략핵잠수함 등 미국 전략 자산의 경제적 전개 확대 △북한 핵 정보 공유 △핵 연합 훈련을 요구할 지렛대도 자격도 없을 것이다.

이런 국제정치적 국익(國益) 타산에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내외에게 협력을 공인했었다. 세계 중추 국가 한국, 오늘의 방산(防産) 수출국 한국에 걸맞은 선택이었다.

우크라이전은 '문명' vs '반문명' 거대 전쟁의 전초전

문제는 '비살상'이라는 단서를 다는 게, 굳이 필요한가란 의문이다. '외교적' 방편임은 알 만하다. 그러나 약소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 러시아의 무력 침탈은 그렇다면 '외교적'이었나? 6.25 남침 때 미국-유엔의 지원이 만약 '비살상' 조건이었다면, 한국 어쩔 뻔했나?

<윌스트리트 저널>은 5월 24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포탄 수십만 발을 미국으로 옮기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실제 상황을 전 세계가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대한민국, 이제는 규범에 기초한 세계질서를 힘으로 변경하려는 악당에 대한 '선의(善)의 문명권' 대열에 당당하게 가담해도 되지 않을까?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5월 28일 게재 되었습니다.